

文, 공수처장 지명하고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환경부장관 후보자 한정에...보훈처장 황기철 교수 임명

추미애, 후임 장관 청문회 뒤 임명 때까지 직 이어가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에 (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된다. 이번 개각은 12·4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집행 정치 결정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흔들리자 '추·윤 사태'를 서둘러 매듭 짓고,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인사 배

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취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등 국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지게 됐다.

다만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 정식 출범 때까지 추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고, 경질성 인사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후보자는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한밭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3회에 합격한 후 서울·전주·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는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정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 인연과 관련해 "어디 출신이라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하신 내역(을 고려했다)"며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법무 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

활동을 해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에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여고를 졸업해 부산대에서 환경공학과와 환경공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또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인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현재까지 역임했다.

정 수석은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기후 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 진해고를 나온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정 수석은 "아텐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장관급 인사 3명

<p>법무부 장관 박범계 1963년생</p> <p>대입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한밭대 경제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대 국회의원(경) 제19·20대 국회의원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사시 33회 	<p>환경부 장관 한정애 1965년생</p> <p>부산 해운대여고 부산대 환경공학과 부산대 환경공학 석사 수료 영국 노팅엄대 산업공학 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대 국회의원(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재)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19·20대 국회의원 	<p>국가보훈처장 황기철 1957년생</p> <p>경남 진해고 해군사관학교 32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파리1대학 역사학 석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재) 해군 참모총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 작전사령관
---	---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새 후보자 모두 1주택자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덧붙였다.

장관 교체가 완료되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법·검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 김중호 민정수석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靑 "추미애, 후임자

청문회 거쳐 임명

때까지 마지막 소임"

청와대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후임이 임명됐으니(수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추 장관의 사의가 수리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낙연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김종인 "만나자" 긍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김종인, 국회서 비공개 회동...입법과제 등 현안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영수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정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이것은 청와대와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을 뵈었을 때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들

을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말씀을 듣고 설명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당시 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라고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그리고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시면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이 충분히 받아들여주시고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여러 입법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이 대표에 따르면 우선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 대표는 "기왕에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 소위에 동참을 하셨으니 이번 회기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 법의 성격상 의원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옳은 것"이라며 "정부안이 왔으니 이를 토대로 답했다."

이 대표가 "지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벌써 3주째 흑한 속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하자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또 "행안위의 제주 4·3 특별법, 문체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국토위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정무위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의 국회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백신에 대한 혼신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정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안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모시고 코로나19에 관한 종합적인 당정회의를 할 텐데 그때 이런 백신의 문제도 말씀하게 정리해서 국민들께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